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0
----------	-----

2025. 3.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능 등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안 제5조)
-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실적의 보고(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이하 ‘충북공투센터’)는 충청북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음.
- 설립 이후 충청북도 내 국책사업 지원, 사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 지원 및 교육과 더불어 공공투자사업 평가체계 연구 및 지방 공공투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민선 5기 도시자 재임 당시 내부방침(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규칙, 2012.4.17. 제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지방분권, 지방이양이라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 공공투자사업의 개념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문제점 없음.
- **안 제3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도지사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
- **안 제5조**는 공공투자관리분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위와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7조는 운영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적 보고를 통해 도정의 투자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14. 5. 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5. 1. 7.>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 7.>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추계

나. 추계 결과

- 2025년 350백만원 기준으로 인건비 증가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1,873백만원 소요
* 인건비, 사업비(여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 입		-	-	-	-	-	-
세 출		1,873	350	362	374	387	400
- 충북공공투자 분석센터 운영지원		1,873	350	362	374	387	400
재원 조달		1,873	350	362	374	387	400
도비	소 계	1,873	350	362	374	387	400
	출연금	1,873	350	362	374	387	400